일주일새 지지율 2배 '돌풍'… 文 대세론 삼킬 '태풍' 될까

조기 대선 이슈&분석

안희정 상승세 어디까지

중도 확장·충청표 흡수 영향
호남 지지율도 20%로 급상승
文보다 뒤진 당내 지지율 과제

조기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세론 흐름을 보였던 호남 민심이 안희정 바람에 들썩이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전국 성인남녀 1007명 대상, 신뢰도 95%, 표본오차 ±3.1%P)에서 안 지사는 19%를 얻었다. 전주보다 무려 9%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 지난 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충청과 호남, 중도 표심을 파고들면서 열흘도 안 돼 지지도가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반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전주에 비해 3%포인트 떨어진 29%를 기록했다. 문 전 대표는 지지율 30%대가 붕괴디고 안 지사는 20%대에 근접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호남 민심의 흐름이다. 같은 기간, 갤럽 조사에서 안 지사는 호남에서 2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지난 2월 첫째 주(1~2일) 조사에서 9%에 불과했던 호남 지지율이 일주일새 두 배 넘게 올랐다. 반면 문 전 대표의 호남 지지율은 지난 주 41%에서 30%로 폭락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안희정 바람은 젊은 이미지를 근간으로 하는 세대교체론을 동력으로 하고 있다. 지난 87년 개헌 이후 탄생한 5명의 대통령 가운데 50대는 노무현 대통령(56세)이 유일했다. 김영삼(65세), 김대중(73세), 이명박(66세), 박근혜(60세) 대통령 등은 60대 또는 70대의 나이로 당선됐다.

64세의 문재인 전 대표에 맞서 안 지사는 젊은 리더십과 시대 교체로 도전하는 모양새다. 젊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켜온 묵직한 정치적 의리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해묵은 진영 논리를 벗어나고 있는 것도 차별화 지점이다. 그는 진보는 물론 중도와 합리적 보수 진영까지 담으려는 기세다. 최근에는 대연정 카드까지 꺼내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이슈 선점을 통해 대선 정국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 야권의 대선 후보로 확장성 등 본선 경쟁력에서 문 전 대표에 비해 강점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기문 전 총장 퇴장 이후 무주공산이 된 충청 지역의 표심 이동은 덤이고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안정감 있는 행보는 50세 이상의 중장년과 노년 세대로부터도 호감을 받는 등 진영과 세대를 극복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안희정 바람이 태풍으로 발전하느냐는 호남 민심에 달려있다. 호남은 야권의 심장이자 민주당 권역별 경선의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이다. 일단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우선 내달 13일을 전후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민주당 경선은 아직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이다. 여기에 호남의 문재인 대세론은 적극적 지지로 형성됐다기보다 정권 교체를 위한 대한 부재의 성향이 있다는 점에서 뿌리가 튼튼하지 않다는 평가다. 호남 민심이 원하는 비전을 강력하게 제시한다면 과거 '노풍'(노무현 바람)처럼 안희정 바람이 태풍으로 북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당내 조직을 바탕으로 호남 전반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호남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연정을 바탕으로 하는 우클릭과 참여정부에서의 대북송금특검 논란 등에 대한 안 전 지사의 화법은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호남의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도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일단 안희정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를 민주당 경선을 통해 태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동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비전 없이는 문 전 대표의 조직력을 뛰어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12일 오후 광주시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 대학원 대강당에서 열린 '더좋은민주주의 광주포럼 여성 및 청년위원회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솔로몬 지혜' 나올까
박대통령측 '고영태 녹음파일' 제시 새 쟁점

특검·헌재 이번주 최대 고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모두 이번주가 중대 고비다. 특검은 1차 수사만료 시한(28일)이 다가오고, 헌재 선고일정에 맞춰 대선 등 정치권 스케쥴이 크게 춤을 출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 대면조사 주력**=특검팀은 늦어도 이번 주 초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와 일정 등이 결정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이다. '2월 초 대면조사'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데드라인'을 다시 설정한 것이다.

특검과 대통령 변호인단 간 잠정 합의된 9일 대면조사가 언론의 사전 보도 문제로 무산된 뒤 양측 사이엔 이렇다 할 접촉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 여부도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지난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집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13일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를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안의 중대성과 특검 수사 기한 등을 고려해 법원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이번 주중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박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증거 수집이 가능해 남은 기간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각하 또는 기각되면 관련 수사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양측이 압수수색 범위, 대상 등을 전격 합의해 '제한적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헌재, 박 대통령 출석할까**= 중요 증인신문과는 별개로 박 대통령 측이 14일 대통령의 헌재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앞서 국회 측은 박 대통령 측에 대통령 본인의 출석 여부를 14일까지 밝혀달라고 했으며, 대통령 측도 "상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겠다며 추가 변론기일 지정을 요구할 경우 이달 24일이나 27일 최후변론을 열고 3월 초께 심판을 선고할 거라는 예측은 빗나간다. 선고일이 3월 13일을 넘기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헌법재판관 7명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14일 변론기일에선 박 대통령 측이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통화 녹음인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 등을 새 쟁점으로 제기하며 추가 변론과 증거 채택을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통령 측은 2000여 개에 달하는 녹음파일을 전날 헌재를 통해 확보했으며 이를 분석해 최순실씨의 과거 최측근 고씨가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악용해 금품을 뜯으려 모의했다는 주장을 펼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연합뉴스

특검 "세월호 7시간 정식수사 불가" 결론
진상 규명 주력 관련자 조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본격 수사가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비선진료' 수사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진술이나 자료가 확보될 경우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자 조사는 이어갈 방침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랜 검토 끝에 최근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가 물리적·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법규상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고 기간 연장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해당 의혹을 정식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진상 규명 대상이지, 처벌을 목적으로 한 수사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의혹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문에서 시작된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물며 생존자 구조 작업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는 작년 12월 1일 특검 출범 당시에도 진상 규명이 가능할지를 놓고 주목을 받았다.

4개 수사팀 가운데 양재식 특검보와 김창진 부부장검사가 속한 3팀이 '비선진료' 수사팀이 아닌 '세월호 7시간' 수사팀으로 불린 것도 이러한 관심을 반영한다.

특검은 이날 한꺼번에 소환된 김상만 전 대통령 자문의, 대통령 주치의 출신 이병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 정기양 연세대 의대 피부과 교수 등에게도 세월호 7시간에 관해 아는 사실이 있는지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